

## 한국기업의 철수에 대한 중국의 시각

### 1. 개요

- 한국기업의 철수에 대해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문제로 다루었던 중국 언론이 최근 점차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보임.
  - 무단철수한 한국기업의 무책임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주로 보도하던 입장에서 철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함.
  -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철수가 대부분 중국 지방정부가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경쟁적으로 외자를 도입한 결과 발생한 폐단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제기
  -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만, 홍콩 기업의 철수를 산업화 과정에서 거치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해석하기도 함.
- 기업들의 철수에 대한 원인 분석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.
  - 새로운 노동계약법 및 인민폐 절상 등 중국의 거시적인 정책 및 환경변화가 한국 중소기업 철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봄.
  -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약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으로 보는 측면도

있음.

## 2. 불법철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

□ 한국기업들의 불법철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국 협력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, 무단철수한 한국기업에 대한 비난이 꾸준히 보도됨.

- 칭다오 일부 협력업체가 한국기업의 불법철수로 겪는 경영난이 주로 보도됨.

• 산둥성(山东省) 지아오조우시(胶州市)의 한 공예품 생산업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, 4년 전에 설립한 이 공장은 한국기업들과의 거래량이 최고 매달 65만 위안에 달할 정도로 한국기업들과 활발한 거래를 이룬 바 있으나,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 중 4개 기업의 사장들이 야반도주해 누계 체불비용이 이미 68만 위안에 달했다고 밝힘.

• 한국기업들과의 거래과정에서 ‘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도 쉽지 않다는 지적임.

- 한국기업의 불법철수로 인해 대출금과 월급을 떼인 중국 측 기관 및 직원들의 상황도 보도됨.

• 뽕산구(福山区)의 한 섬유업체의 무단철수에 대해 해당지역 정부에서 1,236명의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해결해 주었으나, 합법적인 파산절차를 밟지 못해 은행대출상환금액과 중국 측 협력업체에 밀린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.

□ 이와 함께 불법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방정부의 실적심사제도와 ‘철새기업’의 탄생에 있다는 시각도 제기

- 개혁개방 이후 각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수준, GDP 성장률 및 외자유치 규모는 지방정부

실적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간주되고 있어, 각급 지방정부는 자신의 임기(일반적으로 5년) 동안 경제지표를 최대한 끌어올리고, 실적 위주의 행정을 추구

- 지방정부는 단기간에 경제실적을 올리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자기업에게 우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외자유치를 도모함).

- 그러나 지방정부들끼리 외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외자 기업 유치가 빈발해지고,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사례가 나타남.

- 이러한 환경은 소위 ‘철새기업’의 탄생을 야기했다는 것임.

- 이들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 중 지역 간 경쟁적 외자유치 우대정책을 비교해 보고 조건이 나은 쪽으로 언제든지 옮겨가는 기업들을 의미

- 이러한 철새기업들은 원래 이전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중소형 기업인데다가 대부분은 자체 생산이윤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으로 생산원가를 최소화하는 등 우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.

-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 칭다오 사무소 산하 중소기업서비스센터의 분석에 따르면, 무단 철수한 한국기업의 투자규모는 30만 ~ 50만 달러로 전형적인 중소기업에 해당

□ 중국 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대해 산업화 과정에서 거치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해석하기도 함.

-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중에 비단 한국기업만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, 이를 산업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임.

---

1) 칭다오 청양구(城阳区)는 1989년 첫 한국기업 유치 이래, 2007년 말까지 총 2,820여 개의 한국기업을 유치했고, 그 중에 1,825개 한국기업은 2003년부터 5년간 유치한 것임.

- 1960~1970년대 일본의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이 한국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 한바 있고, 1980년대 들어서는 한국, 대만, 홍콩의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륙 혹은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음.
- 이들 경제학자들은 경제고성장으로 인해 중국도 몇 년 안에 대규모의 산업전이(신발, 모자, 의류, 완구 등의 제품)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,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국제적인 대규모 이동 차원에서 무단철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

### 3. 한국기업들의 철수 원인

□ 최근 중국의 거시적인 정책 변화 및 환경변화가 한국 중소기업 철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

- 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

-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기업마다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도 강화됨.

-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유지해 온 노동집약형인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음.

- 일부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우 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30%에 달함.

- 세계개혁에 따른 원가 상승

-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13% 수준의 우대세금을 내던 외자기업이 이제는 내국인기업과 마찬가지로 25% ~ 30%를 지불하게 되었고, 그만큼 이윤이 감소

- 수출환급제도 하향 조정되고 있음.

- 생산제품의 50%를 모회사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환급세의 감소는 기업이윤에 직접적인 감소를 가져옴.
- 인민폐 절상에 따른 수출 기업의 경쟁력 하락
- 지방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미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는 주장도 제기
-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변화
- 지방정부가 외자기업의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공장설립이 까다로워지고, 일부 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게 토지사용세를 물려 공장설립 비용이 상승함.
- 진출한 외자기업에 대해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원가의 상승을 야기
- 원자재 구매 비용의 상승은 기업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임.
- 칭다오의 한 공예품 업주가 제공한 원료가격표에 따르면, 2007년 원료가격이 2005년 가격에 비해 거의 2배가량 인상됨.

#### 4.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대응

##### 가. 중국의 대응

- 칭다오시는 2006년 관련 조사를 통해 한국 기업의 특성 및 유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.
- 2006년 10월 칭다오시 정부정책연구실 연구원 웨시아오리(袁晓莉)는 《칭다오시 외자 유치 기준의 제고를 위한 연구(提高青岛市对外招商引资质量的对策研究)》 보고서를 제출한

바 있음.

-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칭다오시가 외자 유치와 실질 이용액 면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였으나, 무분별한 유치였다고 지적함. 또한, 칭다오시가 외자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우대정책을 통해 외자유치 비용이 급증했음을 지적
  - 웨시아오리 연구원은 칭다오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이라는 점과, 칭다오시의 우대 정책과 값싼 노동력 때문에 들어 온 점을 강조
  - 지방 정부는 토지이용과 세금감면 등 비싼 유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고,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유치
  - 반면에 상하이, 베이징, 장수(江苏)등지에서는 외자유치 과정에서 각종 심사기준을 적용해 산업오염이나 기술수준에 미달되는 기업은 진출을 막고 있으며, 쿤산(昆山)시도 ‘3불정책<sup>2)</sup>’등을 실시해왔고 주장삼각주 등 외상투자 밀집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밝힘.
- 최근 칭다오시 정부는 한국기업의 철수 속도를 조절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.
- 칭다오시 정부정책연구실은 지난 4월 한국기업의 무단철수에 대해 조사팀을 발족
  - 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“칭다오시 정부는 이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철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”고 밝히고 있음.
  - 칭다오시 대외경제무역국(青岛市外经贸局)은 각 지방경제무역국에 관할 내 한국기업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임무를 내린 바 있음.

---

2) 노동자수요가 8,000명이 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, 오염이 심한 산업, 수출환급세가 높은 산업은 모두 유치대상에서 제외함.

- 그러나 철수 기업에 대한 관련법규 미비와 집행력의 결여로 지방마다 자구책을 마련해 대응하는 상황임.
- 웨시아오리 연구원은 조사결과 정부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 했다면서, 청양취(城阳区)의 전체 한국기업 중 2%만이 불법철수를 한데 그쳤음을 예로 들.

## 나. 한국의 대응

- 지난 1월 한국 산업자원부, 외교통상부, 노동부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무역협회대표로 이루어진 “중국내 한국기업 불법철수에 관한 피해상황 조사팀”이 구성되어 칭다오, 광조우 등 한국기업 밀집지역의 불법철수 상황을 조사

<표 1> 칭다오시 한국투자기업 중 무단철수기업 비교표

년 도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합계
신규투자기업수	560	663	1010	1356	1543	1691	801	609	8233
무단철수기업수				21	25	30	43	87	206

- 조사 결과에 따르면, 불법철수하는 한국 기업들은 주로 액세서리 가공, 방직, 피혁제품 등 기술수준이 낮고, 오염물 방출과 에너지(원자재)소모가 큰 전통적인 노동집약 산업임.

<표 2> 칭다오시 무단철수 한국기업의 업종별 분포

	공예품	의류 완구	피혁	상자	신발	방직	기타	합계
2003-2007	63	33	28	14	13	6	49	206
비중(%)	30.5	16.0	13.6	6.8	6.3	3.0	23.8	100

- 한국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연합은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의 불법철수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조사 및 관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.
- 지난 1월 “중국 내 한국기업 불법철수에 관한 피해상황 조사팀”의 구성에 이어 지난 2월 28일 칭다오총영사관이 주관하고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칭다오무역관 및 한국 중소기업

업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 최초의 한국기업청산협조팀이 발족됨.

-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기업청산협조팀이 수리한 기업청산안건은 없었고, 대부분이 기업 청산에 관한 사전 자문에 그침.

□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철수는 노동계약법 등 중국 거시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의 탓도 있지만, 객관적으로 중국의 정책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힘.

- 또한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출 산업 종류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 기술 산업위주로, 진출기업 규모도 중소기업보다는 더 커질 것으로, 진출 지역도 점차 중서부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

#### <참고 자료>

《中国经济时报》, “投资中国外企的进与退”, 2008. 3. 3

《中国经营报》, “韩资撤离:地方政府招商引资弊端显现”, 2008. 4. 21

(자료 정리: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박사과정 이성란)